

넓었던 '전주역사' 전면 개선

정부·코레일·전주시
400억 규모 공동투자

전주역, 철도 위 역무시설
있는 선상역사 형태로 지어
주차공간 확보·편의시설 조성

지어지던 37년이 경과하면서 낡고 협소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전주역사(驛舍)가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의 총 44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를 통해 쾌적한 이용공간을 갖춘 선상역사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온 결과,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 등이 같은 규모로 철도 위에 역무시설이 위치한 선상역사 형태로 새로 짓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 200억원을 투자해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에서는 100억원을 들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기로 했다. 전주시는 50억원을 들여 전주역사 신축에 따른 도로망 구축 등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전주역사가 개선되면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함께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역세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약 300만명에 달하는 전주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1981년 5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



벌써 58년 4.19혁명 58주년인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묘소를 살피고 있다.

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시설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 전주역 대합실 등 여객시설의 면적은 약 680㎡ 정도에 불과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14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전주역사를 전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동영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왔

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국비를 배정하기도 했다.

시는 조만간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구체적인 세부사업 결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3개 기관은 올해 3분기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앞당겨 받아 한

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심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오랜 격언처럼 교통이 편리해지면 전주는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건설, 고속도로 건설, KTX·SRT 고속열차 증차 등 하늘길, 바닷길, 철도 길 등을 열어 전북경제의 새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논의에 이견만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보였던 간극만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을 거쳐 국회차원의 개헌협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송법 등 현안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이 오가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멈춰있는 상태다.

6월 개헌의 선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오는 23일까지임에도 4월 국회는 개최되지도 못해 사실상 6월 개헌이 불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

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 여야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방송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개헌안의 쟁점은 크게 ▲대통령제 연임 또는 중임 등 국정운영방식 ▲국무총리 선출 방식 ▲개헌시기 등으로 좁혀왔다. 민주당은 기존 대통령제를 이어가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방식을 유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등 정부 개헌안이 곧 민주당 개헌안임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제, 국방, 외교, 통일 등 3개 부처만 맡고 나머지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면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안이 사실상 내각총리제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덜고 총리는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강조해왔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22일 태어난 신생아에게 나만의 우표 만들어드려요

전북우정청, 정보통신의 날 맞아 선물로 증정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에 태어난 도내 모든 신생아에게 '나만의 우표'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나만의 우표'란 고객이 원하는 사진으로 제작하는 맞춤형 우표로써 소중한 순간을 추억하거나 기업 로고를 넣어 홍보에 활용된다.

또한 우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지에 붙여서 사용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우체국의 미래고객이 될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정보통신의 날인 4월 22일 출생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만들어주며 외국 인도 가능하다. /최수호 기자

우체국에서 병원 등을 방문접수할 예정이며, 신생아의 부모가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해도 된다. 나만의 우표는 5월초까지 직접 전달 또는 우편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김성철 청장은 "정보통신의 날, 생명 탄생의 소중한 축하 순간을 나만의 우표로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체국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 오늘 실무자간 시범통화... 24일 리허설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을 구축하고 오는 20일 실무자간 시범통화를 갖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간 핫라인 연결과 관련해 실무자끼리의 시범통화가 20일 우선적으로 이뤄진다"며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은 우리 쪽이 청와대, 북쪽이 국무위원회"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직접 통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핫라인의 정확한 설치,

이를테면 대통령 집무실에 핫라인이 설치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개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준비위 차원에서 오는 24일과 26일에 리허설도 두 차례 진행된다.

김 대변인은 "24일 오후에는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해 행사 당일 전체일정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볼 예정"이라며 "26일에는 정상회담 준비위 인원을 좀 더 넓혀서 한번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게 리허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측 리허설로 북측은 선발대가 24일이나 25일께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와 같은 방식의 리허설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매일 INDEX
2면 -전북도 장애인 날 기념식 6면 -KTX 전주역 클래식아 더스카이